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한국 정치에서 시민의 기원:

4·19 혁명을 중심으로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서진영

한국 정치에서 시민의 기원:

4·19 혁명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원 택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서 진 영

서진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 년 8 월

위 원 장 김 의 영 (인)

부위원장 강 원 택 (인)

위 원 박 원 호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민’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의 사전적 정의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시민은 선거라는 정치적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힘을 조직한다. 또한 공공의 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의무를 수행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정치참여 기제는 선거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시민은 1948년 ‘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하였고, 이 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헌국회를 통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법적 측면에서는 시민이라 볼 수 있는 주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그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법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해도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 시민의 권리, 의무,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시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구에서의 시민이 시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한국은 그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한국에서 시민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이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국가의 부정의에 저항하고 공공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은 국가와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애초에 법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한국의 시민이 스스로 그 정치적 의미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건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탄생’의 결정적 분기점이 4·19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는 4·19 혁명 이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 ‘시민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학과 역사학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경로의존 모델을 활용한 사건사적 흐름 속에서 3월 15일과 4월 19일을 주요기점으로 하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지식층, 학생, 언론의 시민담론의 형성, 확산 방법과 과정을 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시민의 탄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국면을 시민담론의 고조기라 할 때, 시민담론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주체는 지식층으로서 당시 대학교수, 기자들의 사상적 공론장이었던 잡지 『사상계』를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식층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의견 분석을 통해 그들이 주장한 핵심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학생의 저항정신이 강조되었음을 발견하였다. 3·15 부정선거 이후 형성, 확산되기 시작한 시민담론은 4월 19일 대학생들의 참여로 재확산되고 서로 흩어져있던 구성원들이 하나로 조직화되어 참여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국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가하고 저항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구호, 격문, 호소문, 선언문 등의 자료를 일차자료로 사용하였고, 이와 함께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여 동아일보와 복간 이후 경향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경로의존 방식이 설명하듯 시민의 탄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지식인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학생들을 언론이 조명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일반대중이었던 사회구성원들을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묶어내어 정부의 부정을 바로잡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본 논문은 국민과 시민의 분기점으로서의, 국가의 부정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모습의 원형으로서의 4·19 혁명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즉, 대한민국 탄생과 함께 만들어져 6·25 전쟁을 거치며 강화된 ‘국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으로 깨어나게 된 정치적 사건이 4·19 혁명이었던 것이다. 4·19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응답하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지향성을 띠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외세와 국가권력

의 영향력 하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형성되었던 ‘국민’이란 존재가 ‘아래에서 위로’ 요구하는 ‘시민’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4·19 혁명은 “미완의 혁명”도, “유산의 혁명”도, “좌절된 혁명”도 아니다. 제도권의 조직된 힘에 의해 규정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수행된 혁명으로서 시민의 존재를 만들어 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No Citizen, No Democracy)’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시민은 바로 4.19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주요어: 시민, 4·19 혁명, 저항, 참여, 민주주의

학 번: 2013-22878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문제 제기	5
제 3 절 논문의 구성	12
제 2장 기존 연구문헌 검토	13
제 1 절 6월 민주항쟁과 시민	13
제 2 절 19세기 말 시민사회 맹아론	15
제 3 절 소결	16
제 3장 이론적 분석틀	19
제 1 절 이론적 바탕	19
1. 기존 민주화 이론 검토	19
2. 경로의존 분석	21
제 2 절 분석틀과 연구 방법	23
제 4장 분석: 4·19 혁명을 중심으로	30
제 1 절 지식층 중심 시민담론의 확산	30
제 2 절 학생 중심 시민담론의 재확산·조직화	38
제 3 절 정치참여와 저항-시민의 탄생	51
제 4 절 소결	58
제 5장 결론	60

참고문헌	63
Abstract	76

표 목 차

[표 1-1] 4·19 혁명 희생자의 직업분포	11
[표 4-1] 1945년과 1948년 각 급 학교 학생 수	39
[표 4-2] 1·2차 마산항쟁 사망자 및 소요죄 입건자	43
[표 4-3] 정치적 대립: 주체와 내용	51

그 림 목 차

[그림 1-1] 포크의 플리스와 근대국가의 시민권에 대한 한국적 적용	6
[그림 3-1] 분석틀	24
[그림 3-2] 세부적 분석틀	24
[그림 3-3] 4.19 혁명까지의 흐름	26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시민의 역할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Günter Grass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민’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시민의 탄생은 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혁명사상의 기초가 되어 구제도(Ancien Régime)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대다수였던 제3신분인 인민과 시민들이 사회 개혁 의지를 드러낸 시민혁명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채택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¹⁾은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의 권리를 제시함으로써 근대적 시민의 탄생을 가져온 정치사회적 선언이다. 누가 시민인지를 규정함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정권에 참여할지에 대한 구체적 원칙이 만들어졌다(Fahrmeir, 2007: 27). 서구의 시민, 시민권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렌도르프는 근대 역사에서 ‘시민’보다 더 역동적인 사회적 존재는 없다고 말한다.

수세기 동안 시민은 증대되는 사회집단의 구성원이자 동력원이었으며, 그들 자신을 정치·경제·사회적 종속과 박탈로부터 해방시킨 주체로서 묘사하고 있다(Dahrendorf, 1974: 673). 유럽의 시민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로마 공화국에서부터 출발하며, 시민을 의미하

1)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a-constitution/la-constitution-du-4-octobre-1958/declaration-des-droits-de-l-homme-et-du-citoyen-de-1789.5076.html>

는 영어 단어 ‘Citizen’의 어원이 라틴어 ‘Civis’에서 온 것임을 생각할 때 그 탄생부터 도시, 도시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폴리스와 공화국의 시민으로 그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진 존재였지만 중세에는 그 의미가 약해지게 된다. 그러나 종교개혁, 프랑크혁명은 근대적 의미의 시민을 창출해냈으며 왕정을 무너뜨리며 시민이 힘을 가지는 역사적 계기이자 모든 인간에게 보편화된 시민 개념이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한, 그것을 기반으로 한 혁명이었다.

시민권은 “국가 내에서 개인이 가지는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멤버십으로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일정 정도의 평등을” 가지는 것으로(Jonoski, 1998: 1)²⁾, 또는 “개인이나 사회 조직을 그 사회의 적합한 구성원으로서 정의하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실천”으로(Turner, 1993: 2)³⁾, 그리고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고 참여하는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으로 정의된다(Dahrendorf, 1974: 292-296). 시민권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서구에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마샬의 이론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마샬의 시민권 분류에 따르면, 시민권은 시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 권리로 나뉘며 순차적으로 발전해왔다. 시민적 권리는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평등의 개념도 포함된다. 시민적 권리는 절대주의 체제의 대응으로서 재판, 인신보호영장 (Habeas Corpus),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개인의 법적 권리 등의 성장 속에서 제도화되었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할 권리며, 사회적 권리는 사회에서 복지와 안보, 사회문화를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 계급적 불평등에 대항하여 시민의 평등을 주장할 원칙이 없었으나(Marshall, 1965: 78-79) 결과적으로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

2) “passive and active membership of individuals in a nation-state with certain universalistic rights and obligations at a specified level of equality”

3) “that set of practices (juridic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which define a person as a competent member of society, and which as a consequence shape the flow of resources to persons and social groups.”

언'이 일대 원칙을 제공한 것이다.

서구의 시민은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서 참여의 제약으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호하기 위해 혁명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쟁취(Turner, 1986: 26, 92), 즉 법적으로 질적으로 '선혁명 후시민'이었다.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 역시 마살이 설명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부여되었고 완만하게 정착되는 안정화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시민'의 사전적 정의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시민은 선거라는 정치적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힘을 조직한다. 또한 공공의 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의무를 수행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정치참여 기제는 선거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시민은 1948년 '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21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보통선거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이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를 통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법적 측면에서는 시민이라 볼 수 있는 주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국가의 수립과 동시에 보통선거권이 제도화되었고, 헌법에 기초한 근대적 사법제도, 삼권분립 등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제반을 구성하는 제도 및 절차가 도입되었던 것이다(박찬표, 2007). 근대적 형태의 국가가 수립되면서 시민적 권리와 의무가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그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법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해도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 시민의 권리, 의무, 역할에 대

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시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구에서의 시민이 시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한국은 그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한국에서 시민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이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시민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한다. 국가의 부정의에 저항하고 공공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은 국가와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애초에 법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한국의 시민이 스스로 그 정치적 의미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건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탄생’의 결정적 분기점이 4·19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4·19 혁명 이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 ‘시민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함께 외형상 서구와 비슷한 형태의 법적, 제도적 시민권은 부여되었지만, 그것이 시민사회 내에 내재화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시민적 권리는 제대로 존중되지 않았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계기로 시민의 “참여가 폭발”한 4·19 혁명으로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만들어진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서의 ‘시민’역시 1960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시민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문제 제기

시민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독특한 구성요소이다. 전제주의든 민주주의든 모든 체제에서 지도자와 그 통치력이 미치는 공적 영역은 존재하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만 시민이란 범위가 존재한다(Plattner, 2009: 5).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민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그 시간이 한정된다.

시민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민은 시간, 공간, 현상의 세 축으로 나누어 정의를 내릴 수 있다(Pearsall & Trumble, 1995: 266). 시간 차원에서는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온 사람(native, aborigine)’,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inhabitant, denizen, dweller, villager)’, ‘이동의 역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settler, immigrant, naturalized person)’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 차원에서는 ‘보편적인 공간의 의미에서 공동체 구성원(member of the community, the man in the street)’, ‘국가의 국민과 세계인(national, cosmopolite)’, ‘농촌과 대비되는 도시인(urbanite, townsman)’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현상 차원에서 시민은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householder, occupant, civilian)’, ‘일정한 정치·경제적 특성을 가진 사람(taxpayer, voter, member of the body politic)’, ‘계급 혹은 통치와 관련된 특성이 있는 사람(burgher, burgess, subject, freeman, commoner)’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시민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상’ 차원의 정의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의 시민의 기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시티즌십(Citizenship)’, 즉 ‘시민권’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투표권, 참정권 등과 같이 시민권으로 번역되는 의미가 그 하나로 시민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둘째로, 시민성으로 번역되는 특성에 관한 것으로, 시민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키피카와 노

만(Kymlicka & Norman, 1995: 284)은 전자를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citizenship-as-legal-status)’로, 후자를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민권(citizenship-as-desirable-activity)’로 분류한다. 이 글에서의 관심은 후자의 의미로서의 시민권이다. 즉, 시민권을 바탕으로 정치적 참여와 공동체적 조화를 지향하는 시민성의 발현이 이루어질 때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의 출현이라는 특성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48년 참정권이 주어졌지만, 서구에서와 같이 시민이 만들어지고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근대-전근대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이분법적 도식은 적합하지 않다(한홍구 2002: 93). 그런 측면에서 ‘시민 없는 공화국’이라는 용어는 정부수립 이후 4.19 혁명 이전까지 우리나라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다. 즉 보통선거권이 일찌감치 주어졌으며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를 보면 선거라는 제도가 오히려 독재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한홍구 2002: 98).

포크(Faulks, 2000: 15)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권과 근대 국가의 시민권을 공동체의 유형, 규모, 시민권의 깊이와 범위, 내용 및 맥락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시민권에 대한 포크의 이러한 비교 방식은 한국의 시민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포크의 비교 틀에 4.19 혁명 전후의 한국적 상황을 대입하면 아래의 [그림 1-1]과 같다.

	폴리스	근대 국가	한국
공동체의 유형	유기적	법적/분화된 결합	법적/분화된 결합 이나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오던 유기적 결합 존재

규모	작다	크다	(근대 국가와 동일)
시티즌십의 깊이	심도 깊다	심도 얕다	심도 깊다
시티즌십의 범위	배타적이고 불평등당연시	갈수록 포괄적이론적 평등 그러나 국가적 문맥에서 제한	(근대 국가와 동일)
시티즌십의 내용	확대된 책무	권리와 제한된 임무	(근대 국가와 동일)
시티즌십의 맥락	노예제 사회 농업생산	가부장적·인종적 자본주의적 체제 산업생산	자본주의적 체제이나 여전히 농업생산 중심 해방 후 미국의 영향으로 외삽된 민주주의 즉, 주어진 시민권

[그림 1-1] 포크의 폴리스와 근대국가의 시민권에 대한 한국적 적용

폴리스 및 근대국가의 시민권의 특성과 한국을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역시 1948년 이후 근대 국가의 형태를 갖추에 따라 공동체의 형태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행정구역의 분화, 도시화, 헌법에 기초한 국가의 틀 정착에 따라 법적/분화된 결합의 형태를 보이며 공동체의 규모도 커졌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며 유지되던 성격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결합도 혼재하고 있었다. 유기적 결합이라는 것은 서구에서와 같은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의미로, 공동체주의, 집단주의를 우선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주체를 ‘우리’의 일부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또한, 미 군정기 이후 미국에 의한 민주주의 교육이 정착됨에 따라 평등에 대한 생각이 보편화되었지만, 시티즌십의 범위가 국가적인 문맥에서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시민으로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과거와 비교하여 확대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에 의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계가 주어진다. 즉, 국가는 헌법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능이 고도화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지는 시민은 상대적으로 시티즌십의 내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 것은 민주공화국이며 자본주의 체제로 공동체가 만들어졌지만, 당시 한국이 제대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농업중심 국가이며, ‘외삽된 민주주의’로 인해 기본적으로 서구와 달리 “주어진 시민권”이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민성은 “시민권의 쟁취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확보된 시민권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보편적인 과제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갖게 됨을 의미하지만(김동춘, 2013: 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쟁 없이 ‘부여된’ 권리였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자각 자체는 미성숙한 상태였다. 이 논문은 시민의 기원에 대한 연구이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성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시민성의 발전을 자유와 권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벌린(Berlin, 1969)은 『자유론』에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즉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무엇을 할 자유(freedom to)’, 즉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긍정적 자유(positive liberty)’를 구분하고 있다. 한편, 자노스키(Janoski, 1998: 29-30)는 시민권에 대하여 수동적, 능동적 권리로 나누어 수동적 권리는 “실존(being), 자격(status), 또는 보유 권리(having rights)”로, 능동적 권리는 “실행(doing), 능력(capacity), 또는 권리의 창출(creating rights)”로 정의하고 있다.⁴⁾ 이들의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성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정부수립 후와 4·19 혁명 이후 상반되는 자유와 권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4) Being means that one has rights, which is a passive position, much akin to “liberties” and “claims.” Doing means that one has the meta-right to create rights, which is an active process described by “powers.” (29)

해방 이전까지 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독립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식민지하에서 정치적 자유도 허용될 수 없었다. 1930년대 일본에서 시민의 번역어로서 ‘공민’은 도입되었지만, 식민지 국가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서의 의무만이 강요되었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민에 대한 논의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광복이 되었다. 당시의 정치세력들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였고, 그것은 민족 모두가 바라는 일이었다. 해방 직후 좌우 각 진영에서는 향후 한반도에 세워질 정부를 목표로 그들의 세를 조직화하고자 수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군정 하에서 정치 활동은 제한적이었으며, ‘시민’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인민’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꾸는 세력도 존재했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제헌국회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보통선거였다. 보통선거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해야 했던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만들어지던 처음부터 보통선거권이 주어졌던 것이다(강원택, 2016). ‘유권자’라는 이름으로 95.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국회가 공포한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의 권리를 오랜 기간 쌓여온 서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보장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한국 정치는 형식적인 민주적 제도는 유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democracy without liberty)’ 또는 형식적인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Diamond 2008: 21~26; Linz & Stepan 1996)의 특성을 보였다⁵⁾. 오히려 선거가 권위주의 체제에 정당성을

5) 프리덤 하우스 지표에서도 ‘선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자유’국가들은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와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모두 충족시키나 ‘부분적 자유’국가들의 경우 ‘선거 민주주의’는 충족시키나 ‘자유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부여하고 지탱해 주는 “선거 권위주의(electoral authoritarian)”⁶⁾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남북 간 대립의 격화와 분단 체제는 반공주의에 힘을 실어 주었고, 이승만은 ‘일민주의’를 통해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동원의 기제’로 전락하게 된다. 1950년 6·25 전쟁은 이러한 현상을 합리화하고, 시민에게는 정치적 복종을 요구하게 되었다(김동춘, 2013: 12-13).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통치자의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반이라는 시민,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에 의해 부여된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통하여 충성과 동원의 특징을 가진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시민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즉, 국가와 시민간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약하고 수동적인’ 시민성을 보였던 시기였다.

법적인 권리는 주어졌지만, 제대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었던 약한 시민은 4·19 혁명을 계기로 강한 시민으로 탄생한다. 즉, 1960년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헌법을 통해 형식상으로는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탈된 공민권과 정치적 시민권을 되찾자는 시도였다(김동춘, 2013: 16).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힘으로 비민주적 통치 권력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으로서 제1공화국의 붕괴를 결과한 4·19 혁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학생·지식인을 주축으로 하여, 하층 노동자, 실업자 등 도시 빈민들을 모두 포함하는 시민세력과 강권적인 국가 간의 대결, 다시 말해서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이 야기한 결과였다 (문병주, 2005: 6).

분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 특히 초기의 경우 ‘부분적 자유’국가로 볼 수 있다.

- 6) Regimes that hold elections but are fundamentally in the grip of an authoritarian leader (Fukuyama, 2013: 6. Ed. Larry Diamond, Marc F. Plattner, Yun-han Chu Democracy in East Asia: A New Centu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직업		희생자 수	비율(%)
학생	국민학생·중학생	19	10.2
	고등학생	36	19.4
	대학생	22	11.8
	소계	77	41.4
사무직노동자 및 서비스업 종사자		10	5.4
생산직 노동자		61	32.8
무직자		33	17.7
미상		5	2.7
총계		186	100

[표 1-1] 4·19 혁명 희생자의 직업분포(오유석, 2000: 216)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와 국민이 우위를 점했던 상황에서, 국민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직접적 계기로 “자유로운, 연대하는, 참여하는 시민”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신진욱, 2008), 4·19 혁명은 국민과 시민이 분화되는 분기점이 되었다. 공공성, 법치성, 연대성의 측면에서 시민성이 구현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긍정적 자유와 능동적 권리를 누리하고자하는 ‘강하고 능동적인’ 시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시민성이 발현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의 탄생이 4.19 혁명과 함께 이뤄진 것이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통하여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대상, 시기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장은 기존문헌 검토로서 연구 주제와 관계되는 기존 연구문헌들의 검토를 통해 이 연구의 특성을 강조할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시민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거나, 혹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유입으로 시민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들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핵심사건으로서의 4·19 혁명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시민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브로델(Braudel, 1958)의 '시간 지속'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시민'이라는 주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민주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민주화 이론을 활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마샬의 시민권 이론을 적용하여 시민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정치 참여의 방법으로서 '저항'의 속성에 주목하며 4·19 혁명을 살펴볼 것이다. 즉, 4.19 혁명 당시의 핵심 주체로 학생, 언론, 지식인을 선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조직을 이끌어냈는지 분석할 것이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기존 연구문헌 검토

시민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민주주의 체제의 확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었다. 민주화 이후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출범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으며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그 기원을 찾는 연구 작업 역시 활발해졌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민의 기원은 대체로 크게 나뉘볼 때 1987년 민주화 항쟁과 조선 후기였던 19세기라는 두 기점으로 나뉜다.

제1절 6월 민주항쟁과 시민

시민 개념의 동아시아적, 특히 한국적 기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조선 시대부터 사용되던 시전의 상인을 가리키는 지금은 사라진 의미의 시민, 둘째, 20세기 일본이 수용한 서구 이념의 번역어로서 공민과 동의어로 사용되던 시민, 그리고 셋째로, 한국 정치변화와 맞물려 발전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민이다. 이에 근거하여 박명규(2009: 178-179)는 1980년대가 시민 개념이 한국적 맥락을 반영하여 직접 수용, 재인식되는 과정이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시민 탄생의 직접적 사건으로, 1990년대를 최대 융성기로 규정한다. 6월 민주항쟁 이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광주=민주=시민’의 등식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유경남, 2009: 166-167),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도시로서의 ‘광주’, 즉 광주의 시민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을 취하는 거의 다수의 학자들은 6월 민주항쟁을 시민의 탄생으로 보고 있다.

김진균(2002) 역시 6월 민주항쟁이 광범위한 중간층의 참여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그들 모두가 주체 의식을 갖고 권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한 ‘시민’의 출현 주역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시민, 시민사회의 출현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들은 적지 않다(손호철, 1995; 조대엽, 1999; 유팔무·김정훈, 2001; 김성국, 2001; 홍윤기, 2004; 정상호, 2007; 박해광, 2010). 특히, 김성국의 경우 6월 항쟁을 통해 “시민사회와 국가의 역사적 분리를 뒤늦게 획득”하였으며 “근대국가의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세력집단으로서, 폭력적 국가와 그것의 제도화된 각종 지배형태에 저항하는 시민의식을 갖춘 진정한 시민이 탄생”되었다고 주장한다(김성국 2001: 56, 68).

이들은 4·19 혁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탄생의 기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4.19 혁명이 ‘학생혁명’이며 ‘미완의 혁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주체가 도시 중심의 학생과 지식인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유진오, 1960; 신상초, 1960; 김성식, 1960; 이재오, 1984; 고영복, 1983; 이종오, 1991; Kim, 1996), 결과적으로 혁명 직후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였고 결국은 5·16 쿠데타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박현채, 1983). 다시 말해 4.19 혁명은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해방의 실현을 위한 미완의 민중혁명이었으며 민중 자신이 아닌 학생에 의한 대리혁명”이었고, “민중적 요구에 기초하면서도 민중 자신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박현채, 1983: 46). 즉 참여 주체가 제한적이었으며,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정진상(1997: 56) 또한 “4월 혁명은 학생세력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변혁운동으로서의 한계는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최장집(2009: 178-179) 역시 1980년대와 비교하여 1960년의 “4·19 학생혁명과 같은 민주화투쟁”은 “학생과 도시의 교육받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배후에 그들의 운동과 결합할 광범한 사회집단을 갖지 못한” 반면 1980년대에는 일명 ‘넥타이부대’로 일컬어지는 사무직 노동자들과 생산직 노동자 등

광범한 사회세력들의 연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4.19가 아니라 1987년의 6월 항쟁이 시민의 탄생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제2절 19세기 말 시민사회 맹아론

한편, 시민의 기원을 이보다 더 앞선 시기로 보는 학자들도 존재하는데, 일종의 ‘시민사회 맹아론’이다. 신진욱(2008: 142-145)은 근대적 시민 개념과 이념을 조선의 실학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근대적 시민 개념이 한국 정치와 문화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세기 말엽이었다고 본다. 특히, 1894년 동학 혁명에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만민공동회 ‘민회’ 집회, <대한민국임시헌장>,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시민성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다. 조항래(1987: 69-70)는 ‘자유’와 ‘민주’, 두 개념을 시민의식의 핵심으로 간주할 때,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로부터 근대적 시민의식이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독립협회 이전 갑신정변, 갑오경장과 같은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패하였고,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운동도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처음으로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후 많은 운동에 정신이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송호근(2013)의 경우, 공론장 분석을 통해 양반과 평민의 공론장을 비교하며, 평민 공론장은 동학의 확산에 힘입어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근대 이행기의 변화된 공론장 개념을 활용하여 시민의 ‘발아’를 설명한다. 강대현(2004: 69) 또한 20세기 전후, 즉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경제적으로 비록 외세에 의해 파행적으로나마 자본주의가 도입되었으며, 과도기적 정치상황에서 취약했던 국가권력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장악되어 국가에 대한 사회의 저항과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하며 이 시기를 “한국시민사회의 태동기”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규(1999: 47, 86)는 시민사회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사회과학자들의 경우 ‘근대의 성립=20세기 이

후=시민사회의 성립'이라는 등식 때문에 20세기 이전을 보지 않지만, 일찍이 잘 발달된 사회의 단위와 조직들이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공공성과 상업성 모두를 지니는 18·19세기 '여항인', 그 중에서도 '왈짜(曰者)'와 그의 반대 세력으로서 소시민과 민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소시민과 민중들의 경우, 대동법, 신해통공 등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에 따라 그들의 지위를 높여나갔고, 19세기 여러 저항을 통해 대항주체로서 정치적 성격을 만들어왔음을 주장한다.

제3절 소결

이처럼 시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9세기 말로 보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말 동학에서 시민을 찾는 것은 너무 이르고, 1987년 6월 항쟁에서 찾는 관점은 시민의 출현을 너무 늦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987년 6월 이전에 이미 시민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황성모(1981: 100)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4·19 혁명에 대하여 “시민혁명은 아니었으나, 한국에서 시민 발생의 기초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4·19 혁명에서 첫째, 집단 의식을 대변한 학생들의 반독재 슬로건, 둘째, 정치권 신장에 대한 요구, 셋째, 정치 붕괴를 야기하는 정치적 공중이 현실적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4.19 혁명이 '학생혁명'에 국한되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당시 증언들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중석(2010: 244)의 말처럼 “4·19는 서울의 4·19일뿐 아니라 광주의 4·19, 부산의 4·19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이완범(2013: 39)은 '4·19' 명칭 자체에 내포한 문제점으로 서울 중심주의와 대학생 중심주의를 지적하며, 대구에서의 2월 28일 고등학생 중심의 “원류적 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대학생이 아닌 지방에서 일어난 4·19 혁명의 전조를 추적한

연구들도 있다(김태일, 2010; 허종, 2010, 이은진, 2010).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성과 대학생으로 제한된 주체를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당시 참여주체를 시민으로 넓히고자 하는 연구라고 볼 수는 없다.

맹아론의 경우는 전통이라는 긴 역사적 흐름에서 기원을 찾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그 때 당시의 모습을 지금의 것과 등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즉,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최대로 소급하더라도 1945년 해방 이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 말기에서 시민의 기원을 찾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동학농민운동, 3·1운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저항의 예를 생각할 때 정치적 저항의 정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 논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쟁취했느냐, 또 이후 권리의 제도화를 이끌어냈느냐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시기가 한국에서 시민성의 기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context)에 집중하여 시민에게 부여된 여러 역할 중 정치적 권리의 신장, 사회적 권리의 등장을 이끌어낸 즉, 정치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적 행위”(Verba & Nie, 1972)로, “어떠한 유형의 정치체제에서든지 일반인들이 지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도자를 교체하기 위한 행동”(Nelson, 1987: 104) 또는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의 행동”(Huntington, 1976: 3-10) 등으로 정의된다.

이영제(2006: 293-294)는 합법성과 체제에 대한 정향을 기준으로 순응적 참여와 저항적 참여, 저항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치참여를 구분하고 있다. 세 범주에서 4·19 혁명에 해당하는 것은 저항으로, 저항은 참여의 통로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봉쇄될 경우에 발생하는 참여의 방법으로 체제 변혁적이며 반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본래

부터 '정치참여'의 '저항'적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왜 4·19 혁명이 시민의 탄생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 이론적 분석틀

사회운동을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개별 주체의 일련의 행동과 노력’으로 정의할 때(Wilkinson, 1971: 12)⁷⁾, 사회운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주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확립을 1차적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사회운동으로 발현되어왔다. 그러한 사회운동을 이끌어 온 주체가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절 이론적 바탕

1. 기존 민주화 이론 검토⁸⁾

4·19 혁명이 민주화 혁명이며 시민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의 민주화 이론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민주화란 “권위주의 체제나 준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보통선거, 시민사회, 법의 지배, 독립적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Huntington, 1991). 민주화 이행과정을 연구한 알프레드 스테판(Stepan, 1986: 64-83)은 여덟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분석한다. 외부적 점령 후 내부적 복원에 의한 민주화, 내부적 개혁, 외부 감시체제 하 도입, 권위주의 정권 내에서의 재민주화, 사회기반 정권

7) “a series of actions and endeavors of a body of persons for a special object”

8) 김용철(2015)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에 기존 이론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p.278-284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였으며, 제시된 이론들 중 적합한 이론들을 조합하여 본 논문의 이론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에 의한 민주화, 정당 간 협정, 민주개혁당에 의한 폭력혁명, 맑시즘에 기반한 혁명전쟁에 의한 민주화 등을 제시하는데⁹⁾, 이 중 사회전반의 압력에 의한 민주화 또는 권위주의 정권 자체에 의한 민주화 등의 유형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보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다(한승주, 1987; 민병학, 1994).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넓게 구성하면, 대체로 아래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이다. 이 접근법은 또 다시 근대화론과 계급론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근대화론에 기초한 접근으로 립셋(Lipset, 1959), 러너(Lerner, 1958), 커트라이트(Cutright, 1963)는 산업화, 도시화, 교육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회에서 정치체제의 민주화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 중 립셋은 남미와 유럽의 민주주의·비민주주의 국가들을 비교 분석하여, 경제생활수준, 정보통신매체의 보급정도, 공업화, 교육수준, 도시화 정도 다섯 가지 요인이 민주정치체제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분석하였다(Lipset, 1963: 31-40). 러너의 경우도 강조한 것이 도시화, 문자해독율, 대중매체의 보급 등을 근대화의 단계로 제시하였고, 근대화와 민주정치와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한다(Lerner, 1958: 87-89).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사회의 가치 및 정향이 시민문화에 근접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무어(Moore, 1965), 러쉬마이어(Rueschemeyer, 1992) 등은 이분법적인 계급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때 민주화의 발전 혹은 지연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둘째, 사회운동론적 접근법(social movements approach)은 정치변동을 위한 대중적 압력의 동원이 민주화이행을 촉발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성취하는 기본 기제임을 강조한다. 즉 민주화 이행은 ‘시민

9) a) internal restoration after external reconquest; b) internal reformation; c) externally monitored installation; d) redemocratization initiated within authoritarian regimes; e) society-led regime termination; f) party pact (with or without consociational elements); g) organized violent revolt coordinated by democratic reformist parties, and h) Marxist-led revolutionary war

사회의 부활'로부터 촉발되며, 시민사회의 민주화압력은 권위주의 정권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적 역학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전략적 선택 이론에 기반, 권위주의 엘리트와 민주화 엘리트들의 전략적 협상 및 선택을 유발하여 최종적으로 민주화전환에 기여한다고 본다(O'Donnell & Schmitter, 1986; Tarrow, 1995; Bermeo, 1997; Hipsher, 1998; Salamon & Ahheier, 1998). 특히 오도넬과 슈미터는 강온파 집권엘리트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요시하였지만(O'Donnell & Schmitter, 1986) 이후 남유럽과 라틴아메리카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의 민주화운동은 반례로 등장하였고, 아시아에서의 민주화 이행과정을 보면 시민사회의 민주화 압력, 민주화운동 세력의 활성화, 부문운동간 연대형성, 높은 수준의 응집력과 동원력(Valenzuela, 1989; 성경룡, 1993)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주었다. 임혁백(1990: 61) 역시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 응집과 분열에 주목한 전략적 선택이론에 기반하여 민주화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는 '권위주의 권력 블록의 분열-반대 세력의 공동보조' 조합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시민의 탄생으로 보는 대부분의 학자가 이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2. 경로의존(Path Dependency) 분석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식의 민주화 이론을 미시이론으로 본다면, 경로의존 분석은 거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경로의존 분석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나 시간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Mahoney & Schensul, 2006: 454). 특히 스티치콤(Stinchcombe, 1987: 103)의 “역사적 설명(historical explanation)”은 경로의존 분석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을 이룬다. 역사적 설명은 이전 시기 특정한 원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효과로서의 사건이 이어지는 시기에 발생하는 효과(사건)의 원인이 되는

설명방식으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 경로의존 분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적 핵심이다. 경로의존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학자들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경로의존의 단계에서 ‘만일의 사태, 우발성(Contingency)’가 필요조건이며 이것이 곧 ‘주요 기점(Critical Juncture)’과 연계됨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본 논문은 따르고자 한다. 마호니의 경우 이에 기반하여 그것을 설명원리로 하는 아래의 경로의존성 모델을 만들었다(Mahoney, 2001: 5).

이전 조건들 → 주요 기점 → 제도적 지속 → 반동적 연쇄 → 결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격을 가지는 이전의 조건들이 쌓이면서 이 조건들의 작용/반작용으로서 주요기점을 이루는 사건 또는 시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지속되면서 이에 또 다시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각각의 시기를 이루는 사건들, 혹은 한 기점에서의 여러 사건은 구조를 재생산하기도 또는 기존의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도 교육효과를 통해 축적되어온 경험이 서로 연쇄작용을 하며 결과로 이어진다(Pierson, 2000: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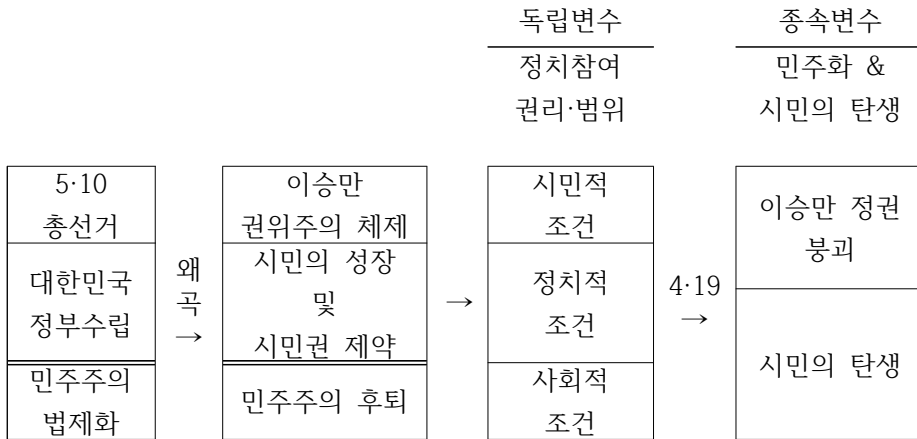
경로의존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함수에서 설명하는 일대일 대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대일 대응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기록”된다는 것, 축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일련의 특정한 작은 사건이 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경로의존은 세 개의 독특한 분기를 포함하는데, 첫째, 특정한 “경로”나 궤도로 움직이게 하는 사건으로서의 초기 ‘주요기점’, 둘째, 이전 분기에서 촉발된 궤도가 강화되는 ‘재생산 단계’, 셋째, 오래 지속된 평형상태를 깨뜨릴 새로운 사건으로서의 ‘경로의 끝’이다(Pierson, 2000: 254). 이러한 흐름을 생각할 때, 이전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성격과 결과로 나타난 사건의 성격이 반대됨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민

주화 운동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적절성이 있으며, 1960년 이후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는데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제2절 분석틀과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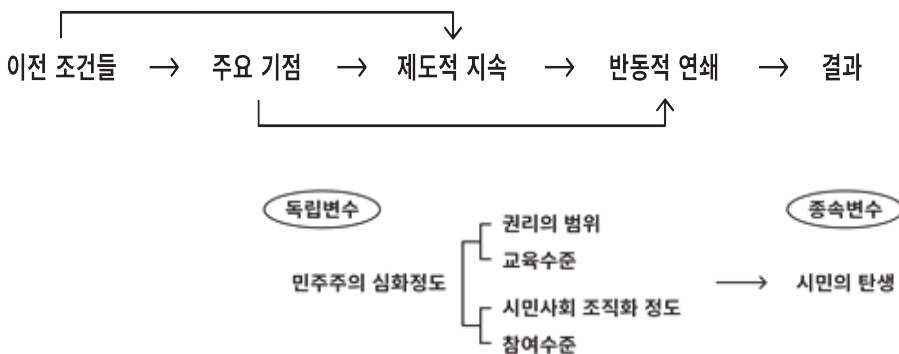
본 논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 즉 시민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위에 제시된 이론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5·10 총선거에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정치사 속에서 여러 사건사들이 모인 각각의 국면사들을 살펴보고 그 국면사에서 핵심으로 만들어진 활동 주체, 즉 ‘시민’의 탄생을 찾아보고자 한다.

위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194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법제화되었으나, 초기부터 주어진 민주주의는 국가/정부에 의해 왜곡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이용한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는 더욱 더 강화되며 그의 반대로 시민의 성장과 시민권은 제약된다. 즉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 성장해 온 학생층과 기존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정치적 참여의 사회적 조건이 성숙된다는 점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시민권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정치 현실이라는 모순이 정치 참여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시민적 조건을 성숙시켰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4.19 혁명의 성공은 또 다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림 3-1]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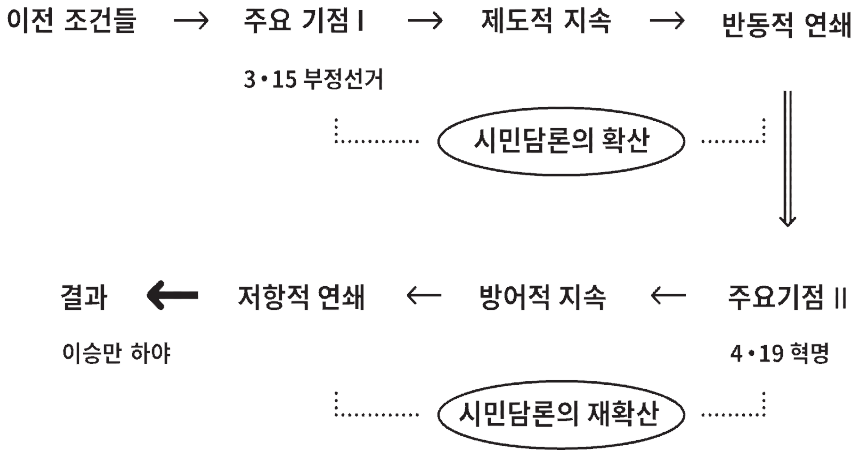
[그림 3-1]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한 논문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경로의존 이론은 기본적으로 앞의 조건이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차례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설명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경로의존 이론을 수용하지만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3-2]의 화살표가 보여주듯 앞의 조건이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나 그 성격이 앞의 조건과 반대의 특성을 지닐 수 있고, 또한 그 영향이 한 단계를 건너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3-2] 세부적 분석틀

이 다섯 단계의 흐름 중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시기는 주요기점에서부터 반동적 연쇄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시민문화, 시민성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접근법과 사회운동적 접근법을 통해 4.19 혁명이 왜 시민탄생의 기원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1948년부터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하야에 이르는 과정, 즉 “시민혁명의 완성”이라 볼 수 있는 그 시기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승만 정권의 등장 이후부터 1960년 3월 15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과 시민적 권리의 제약이 계속되던 상황이 이전 조건들을 구성하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참여의 기제로서 주요한 기제 중 하나인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 1960년 3월 15일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이를 주요 기점(Critical Juncture)으로 한 차례 참여와 저항의 폭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억압기제로 활용했다. 이러한 반동적 연쇄에 대해 학생들의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주요기점의 재등장, 곧 ‘4·19 혁명’으로 이어진다.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시민 담론의 재확산이 압축적이면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결국 4월 26일 이승만 하야로 이어진다. 그러한 역사적 흐름을 경로의존의 방식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3] 4.19 혁명까지의 흐름

첫 번째 주요 기점에서 두 번째 주요 기점 사이의 흐름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민성이 발현되고 시민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정치참여로서의 ‘저항’이 점차 힘을 얻게 된다. 이 기간에는 특히 시민문화의 성장 단계로서 구조적으로 교육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방 직후부터 교육을 통해 축적된 민주주의 역량이 구조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엘리트층에서 주도한 탑-다운 형식의 논의 구조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세대들에게 당시 큰 영향을 미친 지식인들이 이해한 시민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지성계를 대표한 잡지였던 사상계에 실린 글을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구조적 접근법만으로는 시민의 탄생을 말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요기점을 4·19 혁명으로 놓고 이승만 하야로 이어지는 결과, 즉 두 번째 등장하는 반동적 지속과 저항적 연쇄의 과정에서의 담론의 재확산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단시간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 당시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세력인 학생들의 구호, 격문, 호소문 등과 당시 발간

된 신문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지고, 조직되고, 참여하는 연결고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 수집 시기는 1956년 3대 정·부통령 선거부터 1960년 4월까지로 한정한다. 4·19 혁명의 기간과 관련하여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상황을 ‘예비적 국면’으로 설정하고, 넓은 의미에서 세 개의 국면으로 구성되는데, 1960년 2월 말부터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까지를 첫 번째 국면으로, 이후 7월 29일 총선거까지를 두 번째 국면으로,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부터 5·16 쿠데타까지가 세 번째 국면으로 삼는다. 첫 번째 국면은 다시 세 개의 소 국면으로 나뉘는데, 부정선거의 계획과 저항의 발생 즉, 3월 15일까지가 첫 번째, 이후부터 4월 19일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그 이후부터 4월 26일까지가 세 번째 소 국면으로 구분된다. 제1국면의 핵심적 의제는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동원과 이에 대한 저항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본다(정근식, 2010: 28). 이 논문에서는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예비적 국면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1956년 선거는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됨으로써 민심의 이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혁명으로 서서히 고조되는 발단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의 종류는 당시 신문자료와 사상계를 비롯하여 시위, 구호, 선언문, 성명서, 결의문, 격문, 호소문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1차 자료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4월혁명 자료총집을 기본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선별팀에서 수집한 4·19 혁명 관련 자료 전체는 약 4천여 건, 2만 5천여 장이며 그 중 3책 ‘신문기사’와 5책 ‘선언·성명·수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당시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던 집단은 크게 학생층, 지식층, 그리고 언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층은 주로 사상계를 통한 의사 전달을, 학생층은 보다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언론은 그것을 모두 취재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직설적 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3개의 주체로 나누어 자료를 보고자 한다.

셋째, 시민의 속성을 밝히기 위한 1차 자료 준거로서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국가자유도 측정에 사용되는 질문 문항과 2004년에 실시된 KGSS 시티즌십 모듈을 활용하고자 한다. 두 가지 기준을 가져온 이유는 첫째, 프리덤하우스의 경우는 거시적 접근을, KGSS 모듈은 미시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60년 당시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설문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셋째, 시민의, 시민권의 속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설문의 문항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프리덤하우스는 국가의 자유를 측정하기 위해 크게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치적 권리 아래 세 개 영역 10개 검토목록, 시민적 자유 아래 네 개의 영역 15개 검토목록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수화 한다. 정치적 권리는 선거과정,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정부의 기능 영역에 대하여 질문하며 시민적 자유로는 표현과 신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법의 지배, 개인 자율성과 권리 영역에 대하여 측정한다. ‘국가 관료 즉, 나라의 수반과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지, 그렇게 선출된 관료들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지’,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이 군, 전제주의 정권, 외압 등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이뤄지는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학문의 자유가 있는지, 정치세뇌(political indoctrination)로부터 교육제도가 자유로운지’, ‘집회, 결사, 그리고 공개 토론 등의 자유가 있는지’, ‘구성원들에 대한 법과 정책의 적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질문한다. 거시적 차원이라는 의미가 국가 또는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를 측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다르게 KGSS 모듈에서는 여러 측정 문항 중 민주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할 경우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저항’을 중점적으로 본다. 또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개진한다고 할 때 그 중 ‘시위에 참가하기’, ‘정치 모임이나

집회에 참가하기',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기',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관에 접촉하거나 출연하기'의 예시문항을 내용적으로 활용한다. 즉,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이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4장 분석: 4·19 혁명을 중심으로

제1절 지식층 중심 시민담론의 확산

지식층에서의 4·19까지의 반응은 『사상계』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당시 사상계에는 대학교수, 기자 등 지식담론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꾸준한 기고를 하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지식층에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잡지가 『사상계』였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김건우, 2003: 46). 미국의 원조로 만들어진 『사상』이 1953년 4월 『사상계』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태어난 초기부터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핵심 목표로 이를 강조하는 글들이 많이 기고되었는데, 1956년 제3대 정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기존과는 다른 강경한 어조들과 비판적 시각들이 제시된다.

1956년 선거에서 자유당이 제시한 ‘반공통일, 민주창달, 자립경제’의 ‘정책3강’에 대하여 유권자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4대 ‘야당지’의 논조 또한 정부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서중석, 2010: 159, 164). 이 시기 『사상계』의 논조는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대체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수립, 자유의 보장, 국가의 목적, 국민의 각성·행동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상계』 각 호의 권두언을 쓴 장준하의 글들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자유는 최고도로 존중되어야함과 동시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자유를 방해 내지 훼손할 권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 신분의 고하를 가릴 것 없이 타에 균림하여 특권을 행사하거나 타의 영역을 침범하여.....

만약 어떤 정치인이 있어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의 자유를 위협 또는 박탈하는 일이 있다면 이 같은 인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요, 민족 천추의 원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재확인” (장준하, 1956: 12, 13)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역으로 현실 정치에서 자유의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장준하는 말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라는 단어로 직설적 언급은 피했지만 ‘정치적 야욕을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을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바로 이승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주권자인 국민은 긍지를 간직하고 여하한 간섭도 이를 배격하여 민주주의적 권리를 완전무결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되어있다(장준하, 1956: 13).

이 문장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 ‘민주주의적 권리 행사’이다. 정부 수립 이후 굴곡진 흐름 속에서도 선거의 정치는 멈추지 않고 이어져왔으며 ‘주권자인 국민’은 주어진 한 표를 행사해왔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의 신익희와 장면이 내세운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다. 선거는 공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민주주의적 권리의 행사’로서 정부에 대한 민의를 투영하는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 제4대 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신익희의 급서로 인해 손쉽게 당선되었지만, 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기붕이 아닌 민주당의 장면이 선출됨으로써 고조되는 민심의 저항과 마주하게 된다. 『사상계』 6월자 35호(1956)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민의가 창달된데 대하여 만족하고자”한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선거에 대한 평가와 함께 “법을 헌신짝 같이 짓밟고 백성을 버려지 같이 얹보고” 정부에 의해 행해진 부정을 고발한다. 당시 선거는 사르토리(Sartori, 1968: 112)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서 제시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죽산이 득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라는 말이 돌았고, 표 바꿔

치기 등의 수법이 사용되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기에(서중석, 2010: 164-168) 지식인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었고, 이것이 글로 『사상계』에 표출되었다.

9월자 38호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바라고, ‘백성에 봉사하는’ 유일한 목적으로서의 관원의 존재이유를 언급하며 이와 함께 “일의 대소와 상대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분명히 행동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호소하고 있다(장준하, 1956: 13). 부정하고 부당하게 남용된 권력에 ‘칼날을 잡은 자로서’ 대결하는 것이 곧 정의임을 주장하고(윤형중, 1957: 199) 함석헌(1957: 206-214)은 보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현 정부를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부통령 암살 기도, 선거부정 등의 사건들을 고발하고 있다. 1958년에 발표된 함석헌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은 높은 수위로 자유당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민중 잡아먹고 토실 토실 살찐 강아지 같은 벼슬아치들 보고 울어서 무엇해? 여우 같고 계집 같은 소위 측근자 비서 무리들 보고 울어 무엇해? 나라의 주인은 고기를 바치다 바치다 길거리에 쓸어지는 민중이지 벼슬아치가 아니다.

그리고 선거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내놓고 사고 팔고 억지로 하고. 내세우는 것은 북진통일의 구호 뿐이요, 나비위에 거슬리면 빨갱이니, 통일하는 것은 칼밖에 모르나? 칼은 있기는 있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함석헌, 1958: 28, 34)

이외에도 여러 지식인들이 선거를 통해 민심의 이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과 부정을 자행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역시 아래의 글과 같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정치라면 옛사람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가장 맑고 밝고 깨끗하고 올바른, 즉 천의적인 정사를 말함인데 근일 우리 사회의 정치면을 들여다보면 어둡고 칙칙하고 불투명하고 추잡하기 이를데 없고 부패가 그 극에 달하여 송장냄새를 풍기고 흉악함이 마치 문둥병 환자의 얼굴 같으니 정상한 인

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눈과 코를 가리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죽을 지경이다”(김상돈, 1957: 48)

가장 맑고 밝고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는 찾아볼 수 없으며 “눈과 코를 가리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다다른 현실정치를 이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가히 사망신고를 내고 영결식을 치를 순간에 다다른” 자유선거, 민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현실 타개 방법으로 사상계의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투쟁할 것을 주장한다. 이두산의 경우 1956년부터 ‘정권·혁명’ 연작을 통해 정치권력(국가권력)과 혁명과의 관계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치권력이 의당 수행하여야 할 사회적 기능이란 무엇일 것인가?...인민 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권력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은) 시민 대중의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러함으로써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데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만일에 정치권력이 인민대중의 복리를 증진시키지 못하고 인간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유린할 때에는 피압박대중은 그들의 자유와 생명의 옹호를 위한 자기방위의 권리를 주장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혁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권력 담당자의 변경을 의미하며 혁명의 가장 주요한 표징은 정치권력이 한 계급의 손에서 다른 계급의 손으로 옮겨진다는 점에 있다. 혁명의 참다운 의의는 낡은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변환시킨다는, 적어도 이러한 변환을 위한 기본적 제조건을 창출한다는 점에 있다.

“정권·혁명”(이두산, 1956: 199-201)

그렇다면 시민들이 정치권력에 부여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낡은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주체는 누구인가 생각하게 된다. 정권과 연계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인지, 지식층으로 대표되는 중간층인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맡고 있는 최하층민인지 즉, 자기방위의 권리를 주

장하고 실행에 옮기는 ‘피압박대중’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게 된다.

1955년 6월에 발간된 사상계 제23호는 “학문의 올바른 이념을 위하여”이라는 소제목 아래 여러 편의 글을 게재하는데, 핵심은 학생을 특정하여 지식인이 바라본 청년, 청년의 역할 등을 논하고 있다.

“나는 청년 학도들이 우리 국민생활의 흐름을 정당이 판단하고 현재 직면한 입장을 적확히 파악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심신의 발육이 왕성한 시기에 Pathos와 Logos의 수양을 부지런히 하면 자유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요는 자기를 인식하고 진실히 사는 것이 자유의 길일 것이다.”

“학원·학문의 자유”(한교석, 1955: 148)

이후 1957년 신상초는 “레지스탕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청년의 ‘청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신상초가 말하는 청년다움이란 청년이 주축이 되어 정권에 레지스탕스, “현실 개조”를 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촉구한다.

“청년이 청년다운 소이는 이미 이루어진 질서나 가치체계에의 값싼 추종·수락을 거부하고 현실을 개조하려는 열의에 불타는데 있다. 만약에 청년에게 이런 특징이 없어 이미 이루어진 사회제도나 질서 그리고 가치관·가치체계에 무비판하게 적응·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현실을 개조하겠다는 정열이 모자랄적에 그 사회는 벌써 제도에 있어서 화석화하고 문화에 있어서 정체를 면할 도리가 없다”

“레지스탕스”(신상초, 1957: 212-213)

바르지 못한 제도를 추종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님을 강조함과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의 목적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를 파악하여 자유를 위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고치는데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백성은 언제까지나 특권 계급의 밥이 될 수는 없다”(장준하, 1957: 17), “백성의 주장이 관철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백성은 용감하여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

가게 되고 관원이 그 분을 지키고 정당이 사리를 떠나 공당으로서의 면목을 갖추는 날 민주정치는 확립될 것이다”(장준하, 1958: 17)라는 주장을 역으로 말하면, 지금의 자유당은 공당이 아닌, 사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관원이 민을 위하지 않고 특권계급으로 위치하여 민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장준하의 핵심은 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하여 민주국가의 구성원이라면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속성을 가진 ‘구성원’을 곧 현재의 의미와 같은 ‘시민’으로 볼 수 있다.

사상계 저자들이 속한 지식층은 주로 국가와 시민의 전반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다. 장준하가 보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는 어느 한 독재자, 어느 한 군주, 어느 한 계급, 어느 한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고, 온 국민 온 사회에 속하는 것이요 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권재민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뜻이다(장준하, 1959: 18)

국가와 사회 둘의 관계는 ‘주권재민’이란 말로 압축된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라기보다 오히려 역으로 국민에 국가가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국민과 시민은 현재의 기준으로 엄연히 다른 주체이며, 다른 성격을 가지나 당시에는 지식층에서도 ‘국민’, ‘시민’, ‘민중’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여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959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두 용어 사이 분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국가와 국민 혹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국가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정을 추구하고 권리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 또는 ‘국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마음대로 하려할 때,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지니는 가장 강한 존재로서의 시민은 정부의 불법과 부정에 항거해야한다’ 등 지식층은 본인

들의 직접적 행동보다는 거시적 시각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의, 즉 청년층으로 대표되는 학생을 포함,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사상계가 미국의 원조로 발간된 잡지 『사상』이 전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에 호의적인 논조가 강하다는 것(최원식·임규찬, 2002: 34-37)이 당연히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식층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그런 지식층이 그리고 있는 ‘민주국가의 시민’은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는 존재로 나타난다.

아래는 경향신문 폐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여적(餘滴)의 일부이다.

“선거가 진정다수결에 무능력할 때는 결론으로는 또 한 가지 폭력에 의한 진정다수결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된 다수라는 것은 조만간 진정한 다수로 전환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일 것이니 오늘날 한국의 위기의 본질을 대국적으로 파악하는 출발점이 여기 있지 않을까.”

경향신문 1959.2.4.조간 1면 여적(餘滴)

마치 지식층의 촉구에 호응하듯이, 점차 증폭되어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계몽을 통해 시민담론은 확산되고, 곧 폭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4·19 혁명이었던 것이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장준하(1960: 19)는 5월자 82호에서 “민권전선의 용사들이여 편히 쉬시라”라는 제목으로 “자유와 민권은 어느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민의 손으로 쟁취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1956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시간까지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직접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사상계는 4·19 혁명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잡지를 넘어 정치적 여론을 조성하고 형성하고 확산시켰던 소통 공간, 즉 일종의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공론장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공

개성'과 '여론'의 의미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사회적 공간을 지칭한다(주선미, 2010: 172). 가시적으로 보이는 범위를 가지는 공간은 아니지만 사상계라는 공론장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저항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은 누구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제2절 학생 중심 시민담론의 재확산·조직화

그렇다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참가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 주동세력인 학생들의 경우는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그들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그들이 보는 국가, 정부는 어떠한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행하고자 했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학생 집단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군정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38년 3월 15일에 발표된 조선총독부령 제 25호 「중학교 규정」 제1장 1조, 중학교 교육의 목적은 “남자에게 수요한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국민도덕을 함양함으로써 총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데 힘쓰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는 충성스런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해방 이후 미군정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할지라도 핵심은 ‘민주시민 교육’이었다.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바로 교육이다”고 말하는 바버의 표현처럼(Barber, 1992: 15) 미군정기 ‘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바로 ‘민주주의 교육’이었다. 미드(E. G. Meade)는 해방 한국에서 교육제도를 재조직하는 목적이 일본식 제도를 뿌리째 뽑아 없애고 그 대신에 미국식 제도를 세우려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미 군정청의 기본정책이 미국식 민주주의 수립에 있다고 주장하였다(Meade, 1951).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1947년 3월 21일 미 국무장관의 라디오방송이 번역되어 한국에 알려졌다.

“인간은 박탈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 즉 누구에게 주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법적 인정을 받는 시민이 일할 권리를 부정당하거나 생활, 자유 및 행복의 추구를 박탈당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산다면, 이는 자유사회라 볼 수 없다.” (김동구, 1995: 154-155)

기본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주체를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Social Studies’의 번역어로서의 ‘사회과’가 미군정기 신교육 체제의 수립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었다. 사회과의 목적은 민주시민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과였던 것이다. 1945년 9월 24일 전국의 각 국민[초등]학교 개교 이틀 전, 임시 교과과정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일제 강점기 ‘수신’ 과목을 대신하여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새로 ‘공민과’가 설치되었고, 이후 1946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민주적 교과과정에 제정, 역사·지리·공민·이과·공작 등의 교과목을 통합한 ‘사회생활과’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당시 높았던 문맹률과 무지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이해시키기 위한 계몽 작업이 쉽지 않자 문맹퇴치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초·중·고등교육과 더불어 성인교육계(이후 과, 국으로 승격)를 학무국 산하에 두어 사업을 시작하였고, 국문강습소, 공민학교 등도 개설되었다. 미군정기 학교의 양적 성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학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원 수, 학생 수가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특히 학생 수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오욱환·최정실, 1993; 송덕수, 1996).

		1945	1948
국민학교	학교수	2,884	3,443
	교원수	19,729	38,591
	학생수	1,366,024	2,426,115
중학교	학교수	97	380
	교원수	1,810	-
	학생수	50,343	287,512
고등학교	학교수	68	184
	교원수	3,214	5,070
	학생수	83,514	110,055
고등교육기관	학교수	19	31
	교원수	1,490	1,265
	학생수	7,819	24,000

[표 4-1] 1945년과 1948년 각 급 학교 학생 수(오욱환·최정실, 1993: 333)

이처럼 학교의 양적 증가와 함께 당시 배운 교과목의 내용 또한 중요한데, 미 군정청이 1946년 11월 번역·간행하여 전국의 학교에 배포한 『민주주의 교육법』에 제시된 민주주의 교육의 일반목표 열 가지 중 여덟 번 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재주의가 국가나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독재국가에서의 국민생활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 생활을 비교한다.” (오욱환·최정실, 1993: 280)

물론 당시 교과서도 없는 경우가 많았고, 교원을 비롯한 전체적인 물적 부족과 교육에 대한 과수요로 인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은 높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이들에게 이와 같은 ‘공민’ 교육은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교육이 잠시 중단되었고, 헌법에서 보장하였던 의무교육 역시 전쟁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은 점차 높아졌고 특히 4·19 혁명을 주도한 세대들은 미 군정기 실시된 교육의 틀 아래에서 성장하여 고등교육을 받고 있던 세대였던 것이다. 전쟁을 거치며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은 기본 틀은 ‘민주주의’였다.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그들은 중·고등학교 체제보다 비교적 정비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기존의 구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으로, 사고방식으로 교육받고, 행동하기를 요구받았던 것이며 그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의 권위주의적 정치 상황에 비판적인 시각과 방향을 제시했던 사상계의 파급효과가 학생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축적되어온 정권에 대한 부정의, 불만이 민의를 왜곡하는 부정선거가 직접적 기폭제가 되어 폭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그들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하였는지, 핵심주장은 무엇이었는지를 보기 위해 선언문과 호소문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

발작적 방종이 아닌 민주주의라는 것, 그것은 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전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와 자손의 건전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선두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보다 나은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헌법문제에 기록된 바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몽매한 무지와 편협, 그리고 집권과 데모의 제지, 학생 살해, 재집권을 위한 독단적인 개헌과 부정선거 등을 이 나라를 말살하는 행위인 것이면 악의 오염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그 무엇이 되겠는가.

나라를 바로 잡고자 혈관에 맥동치는 정의의 양식, 불사조의 진리를 견지하는 하염없는 마음에서 우리는 다음의 몇 사항을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1. 부정 공개 투표의 창안집단을 법으로 처벌하라.
1.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를 축출하라.
1.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허용하라.
1. 경찰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1. 정부는 마산 사건의 전 책임을 져라.

- 1960. 4. 14, 연세대학생 일동

제시된 선언문은 4월 14일에 발표된 연세대학교 선언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왜곡된 민주주의의 의미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와 자손의 건전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선두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보다 나은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헌법문제에 기록된 바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3월 15일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시위의 분위기는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학생 가운데 직접적 저항의 형태로 가장 먼저 일어난 고려대학교 선언문을 보자.

친애하는 고대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 학도는 이 이상 억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극단의 악덕과 패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탁류의 역사를 정확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10대는 확실히 불쌍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하라.

존경하는 고대 학생 동지 제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하에서는 항일 투쟁의 총 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 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생 동지 제군!

우리는 청년 학생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의 창조와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사실 대학생들은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마산의 고등학생들의 시위에도 대대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었다[표4-2].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인적으로 몇몇 시위에 참여했으나 학교 이름을 내걸고 조직적으로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학과 맞물려 참여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동시에 날이 갈수록 사태는 더욱 더 격화되었으며,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깡패들에게 습격을 받아 다수가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다. '신중파'로 볼 수 있던 대학생층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게 된 원인으로 이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

1·2차 마산항쟁 사망자(13명) 및 소요죄 입건자(66명)		
직업	희생자수	소요죄 입건자
중학생, 중졸	1	14
고교생, 고졸	4	
회사원 및 상공업	1	12
하층노동자	1(구두땀이)	22
무직	6	18
미상(중졸, 고졸)		
계	13	66

[표4-2] 1·2차 마산항쟁 사망자 및 소요죄 입건자(오유석, 2000: 216)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저항의식을 키워가고 ‘올바름’에 대한, 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축적되어온 것이 부정선거와 정권의 폭력적 대응이라는 예상치 못한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의 본분은 대사회 투쟁은 아니지만, ‘우리들 청년 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고,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민주 역사의 창조와 역군’이 되기 위하여 나섰다 고 밝히고 있다. 즉, 민주국가에서 자유라는 최고도의 가치가 위협 당함으로써 대사회투쟁을 해야만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상아의 진리탐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薄土)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학의 현상을 규탄(糾彈), 광정(匡正)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 입을 뿔뿔이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제주의의 표독한 전횡(傳橫)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이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로 민중 앞에 군림하던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은 헤슬픈 것임을 교시(敎示)한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적색전제(赤色專制)에의 항의를 가장 높은 영광

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간은 자유다. 우리에게서 자유는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송두리째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해안으로 직시한다.

이제 막 자유의 전장(戰場)엔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의 투쟁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가고 있다. 자유의 전역(全域)은 바야흐로 풍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을 발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壟斷)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을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빡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칠흑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懺屍)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裸像)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하와 폭력으로써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백보를 양보하라고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같은 학구(學究)의 양심을 강렬히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햇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打手)의 일익(一翼)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아래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死守派)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을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 1960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학생 일동

바로 다음날, 4월 19일 서울대학교 선언문은 문리대 학생 일동으로 발표되었는데,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

과 깊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薄土)에 뿌리려 하는 바"임을 밝히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역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임을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나선 행동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이 침해당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의 자유의 자유 역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4월 19일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각 대학교, 고등학교 선언문이 발표되고 저항이 본격화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적 내용은 민주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이다. 선거권과 기본권은 제헌헌법과, 1954년 일부 개정에서도 변하지 않은 헌법 조항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 1장이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4·19 혁명의 주체가 왜 학생이였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2월 28일의 경북고등학교 결의문과 고려대학교 선언문에 그 답이 분명하게 담겨있다. “순결한 이성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여”(경북고등학교) “반항과 자유의 표상”(고려대학교)인 대학의 학생이기 때문이다. 그 시작에 있어서 학생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도시중심의 지식층만이 현대적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조직층에서도 조직이 있는 것이 학생 뿐”(김성태, 1961: 30)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유가 이러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파급효과를 미쳤고, 참여의 확대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당시에 사용된 구호들을 보자.

“신성한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라”

“학생은 쫓기하라”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별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 살리자”
“학원 내의 정치적 간섭을 배격한다”

동아일보 (2.28.-3.14.)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타도하자”
“대한민국생명선이 대법원에 달려있다”
“민주위한 학생 데모 총칼로써 저지말라”
“학원자유 보장하여 구국애족 선봉되자”
“이놈 저놈 다굴렀다 국민은 통곡한다”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를 축출하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허용하라”
“경찰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정부는 마산사건에 책임지라”
“부정공개투표의 창안집단을 법으로 처단하라”

동아일보 (4.20. 조간 3면)

학생들 자체에서도 저항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을 위의 구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위의 구호는 2월 28일 대구에서부터 3·15 부정선거 직전까지 학생들의 데모 구모이다. 핵심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공간인 학원을 지키기 위한다 더 방점이 있다고 보인다. 즉 학생으로서 정치에 동원되지 말아야하며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 일어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15일의 선거는 방향의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건으로 4·19 혁명 당시 사용되었던 구호들을 보면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학생을 벗어나 국민이라는 더 큰 집단을 상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대항하는 주체로서 이승만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4·19 운동은 전연 학생들의 독자적 행동이었고 또 그것은 가장 적절한 목적지향을 갖고 일어난 운동”(김성식, 1960: 64)으로 사상계의 4·19 혁명에 관한 글 속

에는 학생을 지칭하여 “민중의 대변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대변자로서의 학생은 학원의 자유와 마산사건에 대한 항거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이승만 타도, 민주주의 수호에로 주장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다. 주장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생들만이 아닌 일반인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직설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방어적 자세로 기존과 동일한 성격의 제도적 지속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 정부의 대응은 4·19 혁명 이전과 결코 다르지 않다. 아래는 1960년 4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이다.

사건의 원인이 이처럼 간단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시민 측에 돌리고, 데모 방식이 공산당의 수법과 같다는 궤변으로 마산시민에게 누명을 덮어씌우려고 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고 시민의 가일층의 분노를 자아내는 역효과를 자아낼 것이다.

반공의 구실 하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박탈하여 일당독재의 체제적인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유당 정부는 제권리를 찾으려는 민중을 ‘빨갱이’로 보는 악작풍을 가지고 있는데 빼앗긴 자유와 권리를 찾으려는 선량한 시민에게 공산당의 누명을 뒤집어씌우려는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오늘날 자유당정권이 민중의 신뢰를 거의 완전히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선거라는 이름의 협잡을 자행하여 자유선거제도를 파괴하면서까지 재집권을 하게 된 자유당정부가 이 참을 수 없는 부정·불의의 사태를 시정키위한 대중투쟁을 공산당과 결부시켜 가차 없이 탄압코자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산당식 수법이라 할 것인데 이런 공산당식 수법을 가지고 민주정치를 소생시키려는 대중투쟁을 탄압하려는 것은 우매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마산시민을 공산당으로 몰지 말라” 동아일보 1960.4.14. 석간 1면 사설

마산 사건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구호, 호소문, 선언문에 등장한 문구들을 상기할 때,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4·19 혁명에서 마지막 힘을 가세한 것은 대학교수단, 지식인층이었다. 대학교수단의 4월 25일 선언문은 결말로 이어지는 마지막 저항의 연쇄를 가져왔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동조하여 엘리트계층이라는 계급적 지위를 탈피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즉, 대학교수단의 참여는 4·19 혁명 이전 사상계의 지식인들이 보였던 행동 양식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과거 지식층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4월 19일을 기점으로 학생이 역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사회의 구성원을 '시민'의 이름으로 묶어냈다.

14개조로 이루어진 대학교수단의 선언문은 아래에서 보듯이 혁명의 본질과 목표를 잘 나타내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번 4·19의거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다.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정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우리는 이제 전국 대학 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곁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면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2.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곡해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3. 평화적이며 합법인 학생 데모에 총탄과 폭력을 기탄없이 남용하여 대량의 유혈,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민주와 자유'를 기본으로 한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었다.
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서의 민족적 대참극, 대치욕을 초래케 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회의원 및 대법관 등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과 학생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5. 3·15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 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6. 3·15부정' 선거를 조작한 주모자들은 중형에 처해야 한다.

7. 학생 실상의 만행을 위에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자는 즉시 체포 처형하라.
8. 모든 구속 학생은 무조건 석방하라. 그들 중에 파괴 또는 폭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료 피살에 흥분된 비정상 상태하의 행동이요, 폭행 또는 파괴가 그 본의가 아닌 까닭이다.
9. 정치적 지위를 이용 또는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 축재한 자는 관, 군, 민을 막론하고 가차 없이 적발, 처단하여 국가 기강을 세우라.
10. 경찰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11. 학원의 정치 도구화를 배격한다.
12.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와 정치 도구화하는 소위 문인, 예술인을 배격한다.
13. 학생 제군은 38선 넘어 호시탐탐하는 공산 괴뢰들이 군들의 의거를 선전에 이용하고 있음을 경계하라. 그리고 이남에서도 반공의 이름을 도용하던 방식으로 군들의 피의 효과를 정치적으로 악이용하려는 불순분자를 조심하라.
14. 시구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여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고 이성을 지켜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 단기 4293년 4월 25일, 대학교수단

첫 번째, 1조와 2조의 내용을 보면 3월 15일 부정선거에 저항하여 마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위에 대한 의의와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정체성에 대한 왜곡이나 확대 해석을 방지하고 있다. 두 번째, 3조에서부터 12조까지의 내용으로 이번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와 그의 처벌 등 대응방안과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생에 보내는 당부로 선언문을 마치고 있다.

사실 대학교수들은 혁명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해산시킴으로써 다른 대학으로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4월 25일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로서의 이번 혁명에 대하여 ‘양심에 호소하여 소신을 선언’하였다. 그 바로 다음날 이승만이 대통령령에서 물러난 것을 상기할 때, 정점에 도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

려 교수단마저 움직이게 된 것이 이승만 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교수단이 평가한 4·19 혁명의 성격은 ‘의로운 거사, 의거’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묶어내어 점차 고조된 혁명의 분위기는 4월 26일 이승만 하야,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의 몰락을 시민의 손으로 이끌어내었다.

제3절 정치참여와 저항-시민의 탄생

혁명은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함석헌(2009: 196)은 “정치적 악이 끝장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4.19혁명에서 ‘정치적 악’은 어떻게 ‘끝장에’ 오르게 되었을까. 이는 두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3·15 부정선거를 1차 주요기점으로 폭발하게 되고,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민주주의의 본의, 시민의 권리, 저항의 의미가 확산되며 주체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4월 19일 2차 주요기점을 시발점으로 시민담론이 재확산되며 그동안 흩어져있던 주체들이 학생을 중심축으로 ‘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여지게 된 것이다.

누가 누구에 대해 정치적 악의 끝장에 오르게 되었을까? 위에서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 서로 상반되는 단어를 ‘주체’와 ‘내용/의미’로 나누어보았다. 분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체	
개헌 주모자	(전)국민/주권을 가진 국민
경찰/폭행 경찰관	구국애족
기성세대/성인사회	대학/대학생/학생/청년 학도/
깡패	고등학생
마산사건 책임자/살인/마산사건 원흉	마산시민들
민주주의 반역자	민중
위정자/간신배	시민
이승만 정부/집권당/선거 책임자	애국 동포
전제 권력의 하수인	역군/청춘
정치집단의 사병/고용당한 차인	우리
가부장적	조국의 수호신
특권계급	지성인
행동성 없는 지식인/방관자/	
사이비학자	

내용/의미	
<p>강압적/폭압적</p> <p>경찰국가</p> <p>계엄</p> <p>공산주의/공산당의 조종</p> <p>극단의 악덕과 패륜</p> <p>기성독재</p> <p>데모 제지/시위방해</p> <p>독단적 개헌</p> <p>무지</p> <p>부정선거-3인조, 9인조/불법</p> <p>사악과 잔학의 현상 규탄</p> <p>선거 제도 완전 파괴</p> <p> - ‘국민 주권의 강탈 행위’</p> <p>악정/집권</p> <p>야당의 사주</p> <p>야만적</p> <p>인권 유린</p> <p>전제주의/폭정</p> <p>정권 연명</p> <p>정치놀음</p> <p>최루탄, 공포</p> <p>탁류의 역사</p> <p>편협</p> <p>학생 살해</p> <p>학원 출입/간섭</p>	<p>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p> <p>/의사의 존중</p> <p>계몽</p> <p>국가 기강</p> <p>국민의 권리와 자유</p> <p>권리 탈환</p> <p>규명</p> <p>대사회투쟁/투쟁</p> <p>대학 정신</p> <p>대한민국/민주주의 대한민국</p> <p>무효</p> <p>민심 이반</p> <p>민족애</p> <p>민족정기</p> <p>민주대한의 변명</p> <p>민주주의/민주 역사의 창조</p> <p>반항/항의</p> <p>발전</p> <p>배격</p> <p>법</p> <p>사명감</p> <p>사회적 폐습 타파</p> <p>심판/처단</p> <p>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p> <p>의거</p> <p>이성</p> <p>이성의 해안</p> <p>자발적(인 행동)</p> <p>자성</p> <p>자유선거</p> <p>정의/진리/정의의 옹호</p> <p>정화</p>

	조국애 지성과 양심 지식 평화/평화적 시위·데모 헌법 전문
--	--

[표 4-3] 정치적 대립: 주체와 내용

4.19 혁명으로까지 이어진 정치적 대립에서 주체의 구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우리’와 ‘비아(非我)로서의 그들’의 구분이다.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민주화 압력, 민주화운동 세력의 활성화, 부문운동간 연대형성, 높은 수준의 응집력과 동원력을 필요로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함(O'Donnell & Schmitter, 1986; 한승주, 1987; Valenzuela, 1989)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이분법은 응집력과 연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거리시위, 데모에 참가한 주체는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학생을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대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모두를 아우르는 단어로써 ‘청년학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과 같은 방향에 있는 주체들로 지방도시민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마산시민’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점차 후반으로 갈수록 ‘민중’, ‘주권을 가진 국민’, ‘시민’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에 반대되는 저항의 대상으로 언급된 주체의 핵심은 ‘이승만 정부’, ‘집권당’이다. 초반에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불만으로 ‘선거 책임자’라든지, 고대습격사건으로 ‘깡패’, ‘전제 권력의 하수인’ 등 직접적 사건에 대한 주체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빈도는 곧 낮아지게 되고, 이에 대비되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 방관자들을 포괄하는 ‘기성세대’ 전반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핵심은 ‘민주주의 반역자’라는 주체를 상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킨 주범, 그들이 적으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

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대항주체, 즉 ‘비아’의 점증이다. 다시 말하면, 경찰, 깡패, 선거 책임자 등 사회 각각의 부분집합으로서의 주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승만 정부’, ‘집권당’이라는 더 큰 집합으로 수렴하게 되고 전체집합으로서의 ‘민주주의 반역자’가 등장한다. 점점 커지는 대항주체와 함께 저항도 격렬해 진다.

그들은 강압적인 전제주의, 이승만 정부의 폭정에 저항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난 평화적 시위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국민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로 압축된다. 모두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이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헌법 전문을 언급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54년 헌법 전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시행 1954.11.29.][헌법 제 3호, 1954.11.29. 일부개정]¹⁰⁾

단기 4281년, 즉 1948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

10) 1954년 헌법의 전문은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의 담긴 전문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4년 헌법의 전문을 인용한 것은 4·19 혁명 이전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으로서 제헌헌법이 아닌 당시 기준 현행헌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 5·10 총선거로 선출된 제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전문, 총 10장 103조, 부칙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다. 이 전문에서 짚은 표기로 강조한 부분에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국가의 체제로 하고 구성원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이에 따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대표 선출에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4·19 혁명 당시 헌법 전문을 인용한 이유는 자신들을 대표할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자유로운 선거가 기반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유의 침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통해 이를 증명해보이려 했던 것이다.

4·19 혁명의 단계적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발성’과 ‘저항’을 핵심 성격으로 하는 집합적 정체성 형성인데, 그 흐름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대학생에서 일반 모두에게로 점차 확산됨을 볼 수 있다. 4월 18일, 동래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는 오늘 이 데모를 감행함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것이 어느 외부의 조종이나 권고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며,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자발적인 행동에서 기인된 것임을 명백히” 주장하고 있다. 대전고등학교 결의문 역시 “우리의 거사는 오로지 정의감과 자발적인 의사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던 “데모”는 시민에게로 확대된다. 여기에서 시민의 의미의 변화도 읽어낼 수가 있는데, 도시민으로서의 시민 즉 ‘서울 시민’, ‘부산 시민’, ‘대구 시민’의 성격에서 점차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으로 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포함되는 의미의 확장을 가져온다. “데모 학생들에게 박수로 성원“만을 보내던 소극적이었던 시민들은(동아일보, 4월 19일 조간 3면), “차츰 노골적으로 데모에 환호성을 보내기 시작, 각 대학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을지로 입구에서 합류하고 미 대사관 앞을 거쳐

서울시청 광장 앞에 이를 무렵에는 일만 여명의 군중이 만세! 소리와 함께 경찰저지선을 뚫고 데모대에 완전합류, 쌍방에서 박수와 성원 심지어 감격적인 포옹까지 하면서 애국가를 합창”(동아일보, 4월 20일 조간 3면)하기도 하였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신문들은 4·19 혁명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가의 시민대응에 대한 비판, 사설을 통해 정부에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민권운동에 대해 혹은 옥외집회금지 혹은 데모의 강제해산의 방식으로 이를 억제코자 하고 있지만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제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국민대중의 집결·조직화를 무엇보다도 겁내는 자유당정부는 이 기본 자유 중의 기본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부정·불법사태를 기성 사실화하여 간신히 정권을 붙잡아왔지만, 이것이 위한. 위법적인 처사로서 심히 부당한 일임은 물론이려니와 민중운동을 분산화하여 각개격포로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도 이미 지나갔을 것이다...

제1차 마산사건 및 제2차 마산사건이 근본적으로는 민권운동이요 사건발생의 기본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으니만큼, 현재 입건 중에 있는 시민에 대해서도 이를 불문에 붙이는 관대정책을 써나가는 것이요...

“강경일로책은 사태를 악화”(동아일보 사설, 1960.4.19. 석간 1면)

이를 역으로 보면, 국가는 국민대중의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헌법에 의거,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구성원들은 부정·불법사태에 대하여 언제든지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 대중’으로 표현된 구성원들은 어떤 존재인가. 박명규(2009: 240)는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은 “경제적인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적 성격보다 오히려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토양의 의미가 강하였고 국가권력의 억압적 지배에 저항하는 정치적 주체,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회세력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서구에서의 경제적 의미를 지니는 ‘부르주아지(Bourgeoisie)’와 정치적 시민의

의미를 지니는 ‘시토양(Citoyen)’의 구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시민이 사용되는 것이다. 시토양(Citoyen)은 프랑스 혁명기 군주의 신하와(Sujet du roi) 반대되는 의미로서 사용되었고, 자유에 기반하여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시민성과 연대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다. 이것이 시민의 성격이라 할 때, 4·19 혁명은 시민의 탄생에 있어 분명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이전까지, 식민지 통치유산의 영향과 강력한 국가중심적 반공체제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권위주의 체제는 강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시민이 “상하관계”를 이루는 폐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점차 정착되고 교육에 의한 의식의 각성이 이루어지며 주종관계를 이루는 국가-시민의 구조에서 비민주적 통치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학생을 가장 핵심 조직으로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로 성장하게 된다. 즉, 단계적 구성에 있어서 사상계가 학생에게, 학생은 다시 대다수의 주체에게, 주체는 언론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공유하고, 혁명을 이끌어나갔음을 볼 수 있다.

“쑥고 또 쑥고 놀리우고 또 놀리웠던 대중의 ‘에넬기’는 3·15를 계기로 분류처럼 발산하기 시작한 것”(동아일보, 4.19.)으로 4·19 혁명을 보는 것처럼, 이전까지 국가에, 사회에 순종적이었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주권자’ 시민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제4절 소결

“공론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베헤모스로부터 안식처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 없이는 해방은 불가능하다” (Gouldner, 1980: 371)¹¹⁾

‘국가 대 시민’, ‘국가 대 시민사회’ 이분법에 기반하여 국가는 부정한 존재, 억압적 존재, 공권력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힘의 실체로, 그 반대로 시민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은 옳지 않은 이분법이라는 손호철(1996: 200, 201)의 주장에 일부 동의한다.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강약이 생길 수 있으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시민이 우위에 서는 것을 원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왔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정권, 비민주적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를 견제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이 이끌어왔다. 근대 시민사회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와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관계를 지속해왔으며 이 속에서 조직과 결사를 통하여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여 시민의 고유 영역을 확대, 생산,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 왔다. 4·19 혁명기, 국가로 대표되는 반민주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근대적 교육을 통해 성장한 대학생중심, 지식인, (야당)정치인들이 규합되었고, 점차 일반대중에게 확대되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국민’과 권리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서의 ‘시민’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조건으로서의 ‘시민’을 찾고자 하였다. 시민을 시민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은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 시민이 갖는 역

11) “No emancipation is possible in the modern world, however, without a strong civil society that can strengthen the public sphere and can provide a haven from and a center of resistance to the Behemoth state.”

사의식, 세계관, 가치관, 즉 시민의식 혹은 시민정신이 소유 여부이다. 농민과 노동자는 물론이고 중간계층이나 중산계급의 구성원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계 없는 집단이나 계급은 아니다.

‘자유로운, 연대하는, 참여하는 시민’이 시민의 특징이라 할 때 주어진 자유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결집된 힘을 통한 정치적·경제적 거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정치공동체의 실제적인 발전과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신진욱, 2008: 119, 130)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다.

제5장 결론

“민중은 물이요 정부는 그 속에 사는 고기라...정부의 하는 바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불명예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일은 고대 전제사회에서 성주 나오기만 기다리던 것 같은 시대착오의 생각이다.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용기 있게 시정시켜야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이나 말하고 방관시하고 있는 것은 현대 문명 사회의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인 것이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의 실력과 노력과 투쟁으로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고 결단코 남의 공훈의 선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당면과제”(조봉암, 1954: 62. 90-91)

위의 인용문은 1954년 조봉암이 쓴 “우리의 당면과제”라는 글이다. 1960년 선거를 상기할 때, 저 글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시정’시키기 위한 투쟁이 4·19 혁명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민과 시민의 분기점으로서의, 국가의 부정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모습의 원형으로서의 4·19 혁명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즉, 대한민국 탄생과 함께 만들어져 6·25 전쟁을 거치며 강화된 ‘국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으로 깨어나게 된 정치적 사건이 4·19 혁명이었던 것이다.

기존의 4·19 혁명에 대한 연구는 참여 주체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 논문은 4·19 혁명이 그 이후 우리 정치사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즉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원동력”으로서 작동하고, 그 저항을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든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으로서 4·19혁명을 바라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4·19 혁명이 한국에서 시민 탄생의 기원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국민적 저항권이 행사되는 첫 번째 요건이 ‘법치국가의 질서를 부인하는 불법체제의 출현’(정태호, 2000: 220)이라고 할 때, 헌법과 현실정치의 부조화 속에서 국가와 시민의 전통적인 수동적, 소극적 관

계가 4·19 혁명을 계기로 감시자, 참여자, 룰 체인저(Rule Changer)로서의 주체라는 성격이 추가 되었고 참여와 저항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도, 6월 항쟁에서도 ‘4·19 정신’이 변혁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서구와 다른 궤적을 보인다. “한국적 경로의 특수성”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나라 시민의 탄생은 1950년대 한국 사회의 경우, 미국식 제도의 확산,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공공 영역의 팽창이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시민 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 정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승만 정권은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후퇴시켰다. 시민 사회의 정치적 요구가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치 갈등의 양상은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 사회의 저항으로 전면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국가에 대한 시민 사회의 최초의 전면적인 저항”, 즉 1960년 4·19 혁명으로 폭발한 것이다(김호기, 2000: 694).

이러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에서의 시민을 재정의 한다면 “4·19혁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직화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자유권을 가지고 정치영역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능동적 권리의 확대를 목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갖고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아렌트(Arendt, 1963)는 시민들이 연합한 힘이 근대 국가의 거대한 폭력 기구보다 더 우월한 권력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바로 ‘혁명’이라고 말했다. 국립 4·19민주묘지는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의 독재 권력에 항거한 혁명”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4·19혁명기념도서관은 “민족정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청년학도의 희생을 각오한 용기에 전국민이 거족적으로 호응하여 우리민족에게 새 힘과 희망을 가져다 준 민권수호운동”으로 4·19 혁명을 정의하고 있다. 4·19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응답하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지향성을 띠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외세와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형성되었던 ‘국민’이란 존재가 ‘아래에서 위로’ 요구하는 ‘시민’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4·19 혁명은 “미완의 혁명”도, “유산의 혁명”도, “좌절된 혁명”도 아니다. 제도권의 조직된 힘에 의해 규정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수행된 혁명으로서 시민의 존재를 만들어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역사가 보여주듯이, 시민의 참여 없는 민주화운동은 없었으며, 민주화 운동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베링턴 무어(Moore, 1966: 418)가 ‘부르주아지 없이 민주주의 없다(No Bourgeoisie, No Democracy)’라고 했듯이, 현재의 민주주의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No Citizen, No Democracy)’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시민은 바로 4.19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현. 2004. “시민사회, 한국시민사회 그리고 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9. 57-76
- 강원택. 2016.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특별전시 도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고양규. 1999. “18·19세기 서울의 알짜와 상업문화-시민사회의 뿌리와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13. 45-86.
- 고영복. 1983. “4월혁명의 의식구조”. 『4월혁명론』, 강만길 외. 한길사.
- 김건우. 2003. 『사상계와 1950년 문학』. 소명.
- 김동구. 1995. 『미군정기의 교육』. 문음사.
- 김동춘. 2013. “시민권과 시민성” 서강인문논총 37. 5-46
- 김상돈. 1957. “죽을 지경이다” 『사상계』 53호.
- 김성국. 2001. “손호철 교수에 대한 재반론: 자본주의 국가를 넘어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 새로운 지평의 탐색』. 한울.
- 김성식. 1960. “학생과 자유민권운동.” 『사상계』 83호.
- 김용철. 2015.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민주주의와 인권 15(3). 275-320

- 김진균. 2002. “분단 반세기와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국제학술심포지움. 김진균 교수 저작집. 문화과학사, 2008.
- 김태일. 2010. “대구의 2·28과 4·19혁명”. 정근식, 이호룡 (편), 『4월 혁명과 한국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 1. 선인.
- 김호기. 2000. “4월 혁명의 재조명 : 사회학적 해석”. 문학과사회 13(2). 687-701
- 문병주. 2005. “제2공화국 시기의 ‘좌절된’ 민주주의와 현재적 함의-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5(2) 5-37
- 박명규. 2009.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 박찬표. 200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후마니타스.
- 박해광. 2010.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정치 구조” 민주주의와 인권 10(2), 5-48
- 박헌채. 1983. “4월민주혁명과 민족사의 방향”. 『4월혁명론』, 강만길 외. 한길사.
- 서중석. 2010. 『이승만과 제1공화국-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 성경륜. 1993.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 경남대 극동연구소(편). 『한국 정치·사회의 새 흐름』. 나남.
- 손호철. 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_____. 1996. “한국 민주화 이론 비판” 이론 15, 186-212.
- 송덕수. 1996. 『광복교육 50년』 미군정기편. 대한교원공제회·교원복지
 신보사.
- 송호근. 2013.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민
 음사.
- 신상초. 1957. “레지스탕스.” 『사상계』 46호.
 _____. 1960. “이승만 폭정의 종언.” 『사상계』
- 신진욱. 2008. 『시민』. 책세상
- 오욱환·최정실. 1993. 『미군 점령시대의 한국 교육: 사실과 해석』. 지
 식산업사
- 오유석. 2000. “서울에서의 4월혁명”.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선
 인.
- 유경남. 2009. “광주5월항쟁 시기 광주의 표상과 광주민주시민의 형
 성” 역사학연구 제35호
- 유진오. 1960. “이승만 폭정의 종언” 『사상계』 83호.
- 유팔무·김정훈. 200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 새로운 지평의 탐색』.
 한울.

- 윤형중. 1957. “사회정의의 수립” 『사상계』 43호.
- 이두산. 1956. “정권·혁명” 『사상계』 37호, 38호.
- 이영제. 2006. “한국 사회·시민운동의 정치관여 방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3(1) 287-313
- 이완범. 2013. “4·19 전조로서의 1960년 초봄 지역 시민운동-‘4·19’의 ‘대학생-서울’ 중심사관을 넘어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2), 37-71
- 이은진. 2010. “3·15마산의거의 지역적 기원과 전개”. 정근식, 이호룡 (편),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 1. 선인.
- 이재오. 1984. 『해방 후 한국 학생운동사』. 형성사.
_____. 2011. 『한국학생운동사 1945~1979년』 파라북스.
- 이종오. 1991. “4월혁명의 심화발전과 학생운동의 전개”. 『1950년대 한국 사회와 4·19 혁명』, 이종오 외. 태암.
-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4(1).
- 장준하. 1956-1960. 권두언 『사상계』.
- 정근식·권형택 편. 2010. 『지역에서의 4월혁명-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 선인

- 정상호. 2007. 6월항쟁과 시민사회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28, 42-52.
- _____.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림대학교 출판부.
- 정진상. 1997. “갑오농민전쟁, 3·1운동, 4월혁명, 6월항쟁의 비교분석: 6월항쟁과 한국의 변혁운동”. *역사비평*.
- 정태호. 2000.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공법연구* 28(2), 217-239.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
- 조항래. 1987. 초청좌담 김동일 외, “시민의식과 민주화를 생각한다.” *광장* 3. 68-83.
- 주선미. 2010. “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 *사회과교육* 49(2), 171-183.
- 최원식·임규찬 공편. 2002.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 최장집. 2009.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돌베개.
- 최현. 2006. “한국 시티즌십-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6(1), 171-205.
- 한교석. 1955. “학원·학문의 자유” 『사상계』 23호
- 한홍구.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는 있는가. *시민과세계* 1,

91-110.

함석헌. 1957. “할 말이 있다” 『사상계』 43호.

_____. 1958.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사상계』 61호.

_____. 2009. 『함석헌저작집 3: 새 나라 꿈틀거림』. 학민사.

허종. 2010. “대전 충남지역 4월혁명의 발발”. 정근식, 이호룡 (편),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 1. 선인, 2010.

홍윤기. 2004. “시민적 실존의 철학적 소묘”. 홍성태 역, 『참여와 연대로 본 민주주의의 새 지평』 아르케.

황성모. 1981. “시민의 의미”. 광장 100. 97-101.

Acemoglu, D., Johnson, S. & Robinson, J.A. 2006. Income and Democracy. NBER Working Paper No. 11205.

Almond, Gabriel A. & Verba, Sy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Arendt, Hannah. 1963. *On Revolution*. London: Faber.

Barber, Benjamin R. 1992. *An Aristocracy of Everyone: The Politics of Education and the Future of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erlin, Isaiah. 1969. *Liberty: Incorporating four essays on*

liberty. 박동천 옮김. 『(이사야 별린의) 자유론』. 아카넷. 2014.

Bermeo, Nancy. 1997. "Myths of Moderation: Confrontation and Conflict during Democratic Transitions." *Comparative Politics* 29(3): 305-322.

Boutros-Ghali, Boutros. 1996. *Agenda for Democratiz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Braudel, Fernand. 1958. "Histoire et Sciences sociales: La longue durée." *Annales E.S.C.* 13(4): 725-753.

Cutright, Philips. 1963. "National Political Development: Measurement and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 253-264.

Dahrendorf, Ralf. 1974. "Citizenship and Beyond: The Social Dynamics of an Idea." *Social Research* 41: 673-701. & *Citizenship: Critical Concepts*(1994), edited by B.S.Turner and P.Hamilton. London and New York.

Diamond, Larry. 2008. *The Spirit of Democracy: the Struggle to build Free Societies throughout the World*. New York: Hotl paperbacks.

Fahrmeir, Andreas. 2007. *Citizenship: The rise and fall of a modern concep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Faulks, Keith. 2000. *Citizenship*. Routledge

- Fukuyama, 2013 ed. Larry Diamond, Marc F. Plattner, Yun-han Chu. *Democracy in East Asia: A New Centu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ouldner, Alvin W. 1980. *The Two Maxisms*. New York: The Seabury Press.
- Hipsher, Patricia L. 1998. "Democratic Transitions and Social Movement Outcomes: The Chilean Shantytown Dwellers' Move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Marco G. Giugni, Dong McAdam and Charles Tilly. eds. *From Contention To Democracy*.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Huntington, Samuel p. & Nelson, John M.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 Janoski, Thomas. 1998.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a framework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liberal, traditional,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Quee-Young. 1996. "From Protest to Change of Regime: The 4-19 Revolt and The Fall of Rhee Regime in South Korea". *Social Forces* 74(4). 1179-1209.

- Kim, Sungsoo. 2008. *The Role of the Middle Class in Korean Democratization*. Seoul: Jimoondang.
- Kim, Sunhyuk. 2000.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Kim, Yong Cheol. et al. 2006. "Political Leadership and Civilian Supremacy in Third Wave Democracies: Comparing South Korea and Indonesia." *Pacific Affairs* 79(2): 247-268.
- Kymlicka, Will and Wayne Norman. 1995.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Theorizing Citizenship*. edited by R. Beiner.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erner, Daniel. 1958.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Glencoe, IL: Free Press.
- Linz, Juan & Stepan, Alfred.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69-105.

- _____. 1963. *Political Man: The Social Basis of Politics* (Garden City, N.Y.: Anchor Books, Doubleday & Co.
- Mahoney, James. 2001. *The Legacies of Liberalism: Path Dependence and Political Regimes in Central America*.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honey, James & Schensul, Daniel. 2006. "Historical Context and Path Dependence," in *The Oxford Handbook of Contextual Political Analysis* ed. Robert E. Goodin & Charles Tilly. N.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Marshall, T.H. 1965.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Y:Anchor Books.
- Meade, E.G. 1951.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King's Crown Press.
- Moore, Barrington.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MA: Beacon Press.
- Nelson, John M. 1987.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iner, Myron and Huntington, Samuel P. eds., *Understanding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Little, Brown.
- O'Donnell, Guillermo A. and Philippe C. Schmitter. eds.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earsall, J., & Trumble, B. (eds.) *The Oxford English Reference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ierson, Paul. 2000. "No Just What, but When: Timing and Sequence in Political Processes". ed. John A. Hall & Joseph M. Bryant. 2005. *Historical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Vol. 1. Historical Social Science: Presuppositions and Prescriptions.*

Plattner,., Marc F. 2009. "From Liberalism to Liberal Democracy". in Diamond, Larry and Plattner, Marc F. eds. *Democracy: a read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Rueschemeyer, Dietrich. et al.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lamon, L.M. & Ahheier, H.K. 1998.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 Nonprofit Organization* 9(3).

Sartori, Giovanni. "Democrac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New York: MacMillian, 1968). Vol. 4.

Stepan, Alfred. 1986. "Paths Toward Redemocratiz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in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Laurence Whitehead, 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pp. 64-84, 170-174.

Stinchcombe, Arthur. 1987. *Constructing Social Theo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Tarrow, Sidney. 1995. “Mass mobilization and elite exchange: Democratization Episodes in Italy and Spain.” *Democratization* 2(3): 221-245.

Tilly, Charles. 1984. *Big Structures, Large Processes, Huge Comparis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Turner, Bryan. 1986. *Citizenship and Capitalism*. London: Allen Unwin
_____. 1993. “Contemporary Problems in the Theory of Citizenship”, in Bryan S. Turner ed. *Citizenship and Social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Valenzuela, J. Samuel. 1989. “Labor Movements in Transitions to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s* 21(4): 445-472.

Verba, Sidney & Nie, Norma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Wilkinson, Paul. 1971. *Social Movement*. London, Pall Mall Press Ltd.

Yizhou, Wang. 2001. "China in Yamamoto Tadashi" (ed), *Governance and Civil Society in a Global Age*. Tokyo: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Abstract

The Origin of Citizen in Korean Contemporary Political History: Focusing on April 19 Revolution

Seo, Jinyo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seeking for the origin of citizen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Citizen, as a member of democratic society, is the person who has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create power and participates voluntarily, independently for the society. By participating the election, citizens elect representatives, and through such process they organize social power, perform their duties in balance with own rights to pursue public good. Under the democracy, voting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olitical participation mechanisms.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say that citizens in Republic of Korea were made in 1948, through May 10 General Election. As a first general election, every men and women over 21 can vote with universal suffrage. Soon after, modern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dures, such as modern judicial systems based on the Constitution, separation of three powers, etc. were introduced. As a result, persons who enjoy these rights are

citizens.

However, are they genuine citizens qualitatively? This is the starting point. If they are not, who are the citizens in our society, our country? How they were made? Who is the pers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lso, structure of country and citizen is dichotomized as citizen who participates into the public area and who resist on injustice making constant restrained relationship. In terms of such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y and citizen, subject needs direct momentum to be embodied in the society as the citizen-generally through revolution. When was it in terms of Korean citizen? Seeking for the answers on these questions is the purpose of the thesis. These processes will reach on revealing the origin of citizen in Korean contemporary political history: the April 19 Revolution.

For theoretical framework, path dependency model consists macro frame representing history. Each event history is connected each other and fraudulent March 15 election and April 19 are the two critical junctures in this framework. Based on these two, it is divided into two conjunctures history. The focal point is analysing these two parts in terms of making citizen discourse. The first part of conjuncture is the time of formation and expansion of discourse led by intelligent groups. In response, second part is the time of re-expansion of discourse and specification of formation as citizen led by students mostly. Primary sources are magazine 『Sasangye』, written appeals, slogans, declarations, and newspapers.

The April 19 Revolution is the critical events not only for the dividing point of subject between nations and citizens but also the origin of citizen who resist on injustice of nation. Through this opportunity, participant citizen has been made, changed from traditional passive relationship to observer, rule changer of country. In other words, since the April 19 Revolution, citizens start to grow from the bottom to the top. In this regard, it is no more “incomplete revolution”

or “broke-down revolution,” rather cornerstone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until 1987. In current society, No Citizen, No Democracy.

Keywords: Citizen, April 19 Revolution, Resistance, Participation,
Democracy

Student Number: 2013-22878